

# 전북 정치권과 예산 확보 '맞손'

### 김관영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략 조찬 간담회 기재부 실무과장들 직접 찾아 주요 현안 반영 요청

전라북도과 전북 정치권이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한 국가예산 전략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실국장들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지역 주요 현안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는 지난 10월 27일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대부분 마

무리된 상태이다.

지난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에 대한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국립의화전문대학원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대한 국회 법률안 통과에 여야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특히, 현재 기재부와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내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님들 모두가 촘촘한 일정을 짜서 전북 예산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회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이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새로운 전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국회의 심의기간 중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전북도 주요사업의 착공 방지 및 증액을 위해 도와 지역 정치권이 탄탄한 공조를 계속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미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상임위 일정이 끝나고 예결위 소위에 올라오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만나서 전북 예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목표하는 예산과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발끈을 다시금 질끈 묶어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이 오랜만에 협치를 이루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안 추진 등 결실달 없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기재부와 중요한 시간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 교육정책 홍보 보여주기식에 치중"

###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추경 심사서 "홍보예산 늘어... 내실있는 운영에 집중해야"

전북도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홍보 예산이 보여주기식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22일부터 본격 돌입했다. 교육위원회는 류성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도교육청 정책공보관, 교육국, 감사관, 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



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무분별한 해외연수'와 '작년 대비 대폭 상승한 홍보 예산' 그리고 '도교육청의 기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정린 의원(남원1·사진)은 이전의 4배가 넘는 양의 교육감 공약 홍보책자와 리플렛예산에 대해 "이미 도교육청 정책 홍보를 명분으로 선전, 지면 등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억 넘게 증가했다"며 "아직 시작도 안한 정책들을 홍보하기보다, 내실있는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3조8,628억원 대비 8,161억원이 증액(21.1%)된 4조6,787억원으로 편성됐다. /김경수 기자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

### 박홍근 "국민 명령 거스르지 못한 것"

### "예산 처리 후 조사" ... 국힘 태도 언급 대상·용어·기간 등 두고 물밑 협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집권여당이 결국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략 합의문 서명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집권여당이 진상규명에 함께 나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는 해석을 궁극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승적 결단, 교육정책 측면에서 함께 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국민 정치권 요구뿐 아니라 가족 잃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 울분 앞에서 국민의힘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조특위에서 가급적 조속히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갖고 직접 이분들의 목소리,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운영과 관련 "국민의힘이 아직 명단 제출을 안 했다. 아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지금 회의를 소집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조사계획서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고 요청했고, 내일 오전 10시 국조특위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간사들과 함께 사전에 조율 협의한 계획서 채택을 요청 드린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엄밀히 말하면 국정조사는 내일 본회의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11월24일부터 45일 간"이라며 "본회의 의결이 시작점이고 그 다음부터 자료 요구, 제출받고 검증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걸 예산 심의 과정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 과정을 밟은 다음 처리 직후부터는 기관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같은 본조사 본격 조사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점은 여당과 정부가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폭 전격 수용하면 법정 시한인 12월일이라도 끝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럼 보다 빠르게 국정조사 본 조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 예산, 위법성 예산 같은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

향적으로 과감히 수용하고 초부자 감세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철회하면 시한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여당 태도와 관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며칠 간 이태원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 교환을 해왔다고 한다. 합의 시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박 원내대표 설명이다.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일부 대상 제외, 조사·자료 제출 거부 부권 반영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 속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런 일련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큰 방향에서의 논의는 있었다"며 "우리로서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 의견을 미리 반영해 봐야 한다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야 3당 안에서도 혹시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쳐질 수 있는 기관을 빼고 내지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협상에 들어올 것을 감안해 당초 요구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고 그러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몇 가지 대상에 대해 제외시키는 것을 요청했고 저희 법무부는 빠져도 대검찰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했다"며 "마지막 쟁점 중 하나였는데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핵심 원인은 아니다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마약 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전자는 경찰청 후자는 대검을 넣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또 "용어에 재발 방지란 부분을 좀 더 그쪽(여당)에서 반영하자고 수정했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여당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에 관해서는 국회의장 중재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기간은 60일이었으나, 합의안에서는 45일로 조정됐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필요 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했다. /뉴시스

## 정부 IRA 대응 부실 등 현안·민생 두루 챙겨

### 민중신영대 의원,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의정으로 보답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2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상임위별 여야 의원 한 명씩을 선정했다.

신영대 의원은 평가 기준인 민생현안과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에 관한 깊이 있는 질의, 정책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입법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 부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저조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삼성 세탁기 폭발사고 은폐 의혹 △동남아 한국 상표 침해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정책 현안 뿐 아니라 민생까지 두루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우리 산업 환경이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 등 환경



적, 구조적 위협에 직면해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만큼 새 정부의 산업, 에너지, 통상 정책의 방향성을 면밀히 살피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정책, 소상공인 정책들이 잘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상을 무겁게 받들겠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감사와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송영길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경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재송치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